

# 청년 N포 현상과 법

법무법인 콤파스 변호사 이필우

## 1. 들어가며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 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저성장, 분배의 양극화, 경기 침체의 늪에 빠져 헤어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청년세대에 대해 이야기할 때 'N포'라는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되었다. 처음 연애를 하지 않는 초식남에서 시작해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의미의 단어인 3포세대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더니, 더 나아가 5포세대, 최근에는 N포세대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위의 용어는 대한민국 내일의 경제와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용어기 때문에 단순히 사회적 현상의 문제를 지칭한다고 할 수 없다. 사회는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고 연결 고리의 단절은 사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청년의 N포 현상은 결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캔거루족<sup>1)</sup>, 베이비푸어<sup>2)</sup>, 워킹푸어<sup>3)</sup>, 렌트푸어<sup>4)</sup>, 하우스

- 
- 1) 학교를 졸업해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취직을 하지 않거나, 취직을 해도 독립적으로 생활하지 않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20~30대의 젊은이들을 일컫는 용어.
  - 2) 출산과 육아로 인해 지출이 증가하면서 빚을 지게 되는 젊은 부부를 말한다. 베이비푸어는 국립국어원이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한 해 동안 일간지와 인터넷 등 139개 매체에서 사용한 신조어를 정리한 <2012년 신어 기초 자료> 보고서에 실린 바 있다.
  - 3) 워킹푸어(Working Poor·근로빈곤)는 일하는 빈곤층을 뜻하는 말로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1990년대 중반 등장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푸어<sup>5)</sup>가 되지 않기 위한 의식에서 생겨난 현상이다.

현재의 청년 세대는 대한민국의 외환위기(IMF 사태) 이후에 경제적·감정적 상실을 학창시절에 직접 겪었거나 부모의 상실을 경험한 세대이다. 이 세대는 풍요와 상실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전후 최초의 세대이다. 이러한 최초의 경험은 다양한 사회적 현상으로 발현되고 있다. 이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다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측면만 더욱 강하게 외부로 표출되고 두드러지는 것은 안타까움 점이다.

이러한 청년 N포 세대를 법의 시작에서 바라보고 추후 정책의 방향과 입법 방향을 예측해 보도록 한다.

## 2. N포 세대

사회,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 결혼, 주택 구입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포기한 게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기존 3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 5포 세대(3포 세대+내 집 마련, 인간관계), 7포 세대(5포 세대+꿈, 희망)에서 더 나아가 포기해야 할 특정 숫자가 정해지지 않고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세대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용어에서 5포 세대까지는 현실에 대한 어려움과 우려를 드러내는 것이고, 7포 세대의 꿈과 희망의 포기는 미래의 포기를 의미한다. 이것은 단지 개인 또는 사회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 3. 청년과 법

---

4) 급증하는 전셋값을 감당하는 데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느라 저축 여력도 없고, 여유 없이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집을 가지고 있음에도 대출이자 등으로 실질소득이 줄어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인 하우스푸어(house poor)의 전세판이다.

5) 일을 해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뜻하는 워킹 푸어(working poor, 근로빈곤층)로부터 파생된 용어이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주택 마련을 위한 무리한 대출로 인해 생긴 이자 부담과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뜻한다.

## 가. 청소년과 법

### (1) 청소년 용어가 포함된 법의 종류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법은 아래와 같다.

- 청소년기본법(1991. 12. 31. 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2004.2. 9. 제정)
-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1981.4. 13. 제정)
-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1969.7. 28. 제정)
- 청소년보호법(1997.3. 7. 제정)
- 청소년복지지원법(2004.2. 9. 제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4.5.28. 제정)

### (2) 위 법의 기본내용

#### (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다)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청소년에 대한 전인교육(全人敎育)과 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관과 국가관을 정립시켜 조국통일과 민족 웅비(雄飛)의 새 역사 창조에 이

바지할 수 있는 민족주체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세계로 향한 진취적 기상을 북돋우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청소년의 스카우트활동을 지원하고 선도(善導)·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바)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나. 청년과 법

### (1) 청년 용어가 포함된 법의 종류

청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법은 아래와 같다.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2) 위 법의 기본내용

(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sup>6)</sup>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6)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 (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뢰사회 구축의 기반이 되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과의 소통 및 청년 관련 정책·사업의 기획·조정·평가 등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청년위원회를 둔다.

(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4조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추가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백50만원

(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확대 지원 5. 퇴직근로자 등의 숙련 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사)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특별과정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산업교육기관에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의 융합인재 및 청년창업가 양성 특별과정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력 등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다. 위 법의 검토 및 소결론

청소년 또는 청년이 들어간 법의 개략은 위와 같다. 위의 법은 청년의 보호 또는 청년 취업에 포커스를 맞춘 법률이 대부분이다. 이는 그간 정부의 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의 문제에 집중되어온 결과일 것이다.

문제는 단순히 취업에 모든 관점을 두고, 실업률과 그의 발표에만 집중을 한 나머지 취업의 질과 생활의 질에 관하여는 논의가 생략 점이 있다. 서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세대는 풍요와 상실을 모두 경험하고 있는 세대이다. 이에 따른 정서적·사회적 발현의 모습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별도의 논의의 주제라 논의하지 않겠으나, 취업 또는 생활의 질과 연결되지 아니하고 있는 청년 실업의 대책과 그 관련 법률은 현재의 N포 현상의 대안이 되기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4. 청소년과 근로

##### 가. 청소년의 정의 및 법적 보호

모든 국민은 근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연소자인 청소년도 일할 수 있다. 청소년<sup>7)</sup>의 근로활동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약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현장에서 보호받지 못하거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근로는 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청소년의 근로 활동을 보호해 주는 법률에는 「근로기준법」, 「청소년 보호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등이 있다.

##### 나. 청소년 근로 보호에 관한 법률

###### (1)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

7) 미성년자”는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민법 제4조).

8)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된다(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2) 근로기준법

###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

①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 다. 위 법의 검토 및 소결론

대한민국 헌법은 청소년의 근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특별히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과 청소년 보호법을 통해서 고용금지업소를 지정하는 한편, 근로계약과 임금 청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 외에 근로청소년에게도 근로기준법 및 근로에 관한 제반 규정 모두가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구 새정치민주연합의 박광온 의원은 근로계약의 체결, 임금, 근로시간 부당처우를 받았을 경우의 대응방안과 같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교육을 모든 청소년에게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sup>9)</sup>. 물론 청소년 근로교육에 관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2년 주기)’를 진행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법안이 가결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위의 관점은 다시금 고려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근로<sup>10)</sup>는 단순히 근로자이고 미성년자이거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넘어서 N포 현상의 기반이 되는 상실감과 박탈감의 시작점이 될 수 있고,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청소년 근로교육이 단지 청소년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의 내일을 위한 것이라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대상 근로조건 기준 교육 실시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경우, 2015년에 60억 7,800만원을 시작으로 2019년에 68억 9,100만원이 소요되어 총 324억 9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sup>11)</sup>에 따라

---

9)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91469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의 근로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근로 청소년의 다수가 단시간근로(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하면서 열악한 근로 환경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부당행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특히, 청소년이 근로계약의 체결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근로 중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교육의 실시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근로 청소년 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고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10)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고려한다.

11)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는 점은 위 논의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의 N포 현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위 예산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 5. 청년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방향

### 가. 청년기본법의 제정 필요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의 보호 또는 취업에 집중하여 법이 제정되어 왔고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사회현상을 모두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청년에 대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첫 걸음으로 청년기본법의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여야는 20대 국회에 들어서 각 청년기본법안을 발의하였다.

### 나. 청년기본법

#### (1) 신보라의원 등 122인 안

#### (가) 제안이유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은 최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을 비롯한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표 3]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

(단위: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청소년 근로기준 교육사업비	6,078	6,277	6,480	6,684	6,891	32,40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에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3조).
- 다. 청년의 권리와 책임 선언(안 제5조).
- 라. 매년 8월을 청년의 달로 지정(안 제7조).
-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바.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정부는 청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 사.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청년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소속 지역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아.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6조).
-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증진 및 확대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청년단체가 추진하는 청년의 능력계발, 사회참여

의 촉진·확대, 문화 및 복지증진, 고용확대 및 창업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 (2) 이원육의원 등 10인 안

### (가) 제안이유

최근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경제·사회 등의 불안, 그리고 기술발전과 글로벌 기업화로 인한 고용 축소 등으로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대치에 육박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높은 주택 가격과 학자금으로 주거난과 채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출산·양육 비용 등을 이유로 결혼과 출산 등을 포기하는 등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은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임.

이러한 청년들의 어려움은 비단 청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미래의 노년 세대를 부양하는 경제 기반의 붕괴로 미래 세대와 국가에 막대한 노후 부양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급속히 줄어들어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각종 사회 문제로도 이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청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청년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전국가적인 지원을 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고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고용과 주거·부채 안정, 결혼·임신·출산·양육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한편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높이고 청년의 능력개발과 청년문화 창조·육성을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세대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청년의 권리 및 청년발전과 청년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능력개발과 복지 등의 증진 및 청년 문화의 창조·육성을 도모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3조).
- 다. 청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선언함(안 제6조).
- 라. 매년 중 1주간을 지정하여 청년주간으로 함(안 제7조).
- 마.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청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도록 함(안 제11조)
- 사.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청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아.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4조).
- 자.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정부는 청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16조).
-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정당은 청년정치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7조).

-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개발을 위해 교육훈련 기관과 교육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저소득층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장학 시책 및 학자금 지원·융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8조).
-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역청년인재 및 저소득, 저학력, 무직자 등 취약청년의 취업 촉진 및 자립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며, 청년의 근로환경 및 근로조건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9조).
-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안정, 주거환경 개선,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및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 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결혼 및 임신·출산·양육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 및 보육료·양육수당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3조).
- 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문화의 특수성과 청년의 여가수요를 고려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며, 청년의 건강권 보장 및 취약청년에 대한 복지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24조).
- 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창의적인 청년문화를 창조·육성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문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25조).
- 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7조).
- 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청년시설 및 청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 머. 정부는 매년 주요 청년정책의 수립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6조).

## 다. 청년기본법안의 검토 및 의견

여·아가 발의한 청년기본법안은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유사하다. 기본적으로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것과 청년위원회를 신설하는 것 그리고 청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 법은 청년 정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그 의무에 따라 청년 정책을 수립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법 제정에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기본법의 성격상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을 담는 것도 무리가 있다.

다만, 위 법안의 공통점은 청년 정책이 필요하고, 청년을 지원해야 하며, 그 지원에는 취업·출산·육아·양육·여가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높게 평가할 수 있으나 위의 문제가 단순히 지원이나 실태파악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삶의 모든 주기와 연결된 문제이며 단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닌 영·유아 정책, 노인 정책, 경제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라는 인식을 담고 있는지 의문이다.

19대 회기에도 청년발전기본법안이 발의되어 여러 번의 공청회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개별 법안에 있어서 실효성의 문제와 관련법령의 정비의 문제, 현실적으로 이들 기관이 모든 소관 업무를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함에 따른 조직, 인력, 시간상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본 조항이 형식화할 우려가 있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 등으로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청년기본법은 필요하다. 하지만 어떠한 내용을 담아낼 것인지에 대하여는 다시금 논의 역시 필요하다. 현재의 법안이 국회의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가결될 수도 있다. 다만 청년발전기본법안에 대하여 지적된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청년기본법은 유명무실한 법이 될 수도 있다. 그리

고 형식적인 실태 파악 및 복지 측면의 지원에 그칠 가능성도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의 수렴 및 종합적 고려가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그 연구에 기반하여 조속히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 6. 마치며

청년의 정의는 각 국가의 상황과 개별 법령의 취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N포 현상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단지 청년의 문제가 아닌 노인과 장년 그리고 영·유아의 문제이고, 현재와 미래의 문제이다.

모두가 문제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N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와 정당 그리고 시민단체가 이에 대하여 고민하고 연구하며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가 미비한 것 역시 사실이다.

법은 사회 현상 보다 뒤에서 따라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을 통해서 사회 현상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정부와 정당은 정책 개발을 통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현재 발의된 청년기본법은 정부와 정당의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법안으로 생각됨과 동시에 마지노선이라는 느낌을 준다.

따라서 N포 현상의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노력은 특정 연령층과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라는 인식과 함께 이의 해소를 위한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기대해본다. 풍요와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풍요만을 누리며 상실만을 비난한다면 결국은 상실만 남을 것이다.